

노동조합의 정책참가

자본의 목적이 이윤의 증식이라면 노동운동의 목표는 진보의 축적에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률과 제도의 제약과 간섭을 넘어서는 거대한 운동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그 전진과정에서 기성의 관습과 율법을 부단히 수정하도록 강제하였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벽을 허물어 계단으로 쌓는 운동을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은 총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운명을 더 이상 다른 집단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는 정치세력화와 함께 제2, 제3의 날치기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자구(自救) 수단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소소한 시비거리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사실로 확정되었고, 그동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다양한 제도적인 절차와 과정들은 불가피한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를 이번 호의 특집으로 다루면서, 정책참가에 임하는 노동운동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공식통로로 존재했던 한국노총의 정책참가 활동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선진 각국의 노동조합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 보았다.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는 당장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기에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 그러나 길이란 한번 들어서기 시작하면 되돌아 나오기 어려운 법이다. 떠나기에 앞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가려 하는지 물어보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지도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노동조합 정책참가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고 정치운동이며 계급운동이다. 이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요건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예비적 조직화'이기도 하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총파업 또는 대중 파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무기이다. 전면적으로 전국의 생산을 중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정적인 중대성을 갖는 문제이고, 그 명확한 방향은 정치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총파업 투쟁은 정치투쟁이다.” 윌리엄 포스터가 그의 <세계노동운동사>에서 주장한 대목이다.

그렇다. 총파업은 그 요구가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적 무기인 총파업이 반드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요구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입증되었다. 노동운동이 정치적 권력을 전부든 일부든 장악하고 있거나 정책 제도 개선을 이룩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투쟁의 결과는 지배세력의 손에 의해 탈취되거나 반격에 의해 무위로

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정책 제도 개선 투쟁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함께 노동운동의 중차대한 정치적 과제로서 제기되는 것이다.

정책참가가 왜 필요한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그리고 그 둘의 결합은 노동조합운동의 기본 임무이다. 경제투쟁은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들로 하여금 노동수탈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성격을 인식하게 하며 단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일깨운다. 그러나 노조운동이 벌이는 경제투쟁은 자본주의적 지배나 수탈의 결과에 대한 투쟁일 뿐이지, 그 원인에 대한 투쟁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투쟁만으로 정치권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투쟁과 아울러 정치투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을 촉진하고 경제투쟁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확립해 갈 뿐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의 개혁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의 전화 또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이 취해야 할 행동원칙인 것이다.

노동운동이 추진하는 정치투쟁은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과 제도적 요구투쟁을 기본 축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는 바로 이 제도적 요구투쟁과 관련되어 있다. 제도적 제요구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이런 계급적 통일 요구야말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국가권력과 대결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 요구투쟁의 중요 수단의 하나가 바로 노조의 정책참가이다.

1) 정책참가는 제도적 요구투쟁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도적인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고

제도적인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고 정치운동이며, 계급 운동이다.

정치운동이며, 계급 운동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정책 개선은 노동 생활 조건과 기본권리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구 투쟁은 자본주의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역량 증대라는 '예비적 조직화'의 의의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노조의 정책참가는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 정책 개선은 자본과 권력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고, 분명 개량적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양보와 개량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양보와 개량은 노동자 계급의 변혁적 투쟁을 약화하고 분열시키며 체제안으로 편입케한다는 점에서 탄압과 통제 그리고 폭력적 지배와 본질상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양보와 개량이 노동자계급의 육체적 정신적 퇴화를 막고, 그것이 노동자의 투쟁의 성과로서 획득된 것으로 더 큰 단결과 투쟁을 촉진



하게 되며 체제 개혁을 위한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양보와 개량이 투쟁의 목표인가, 과정의 문제인가 하는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량을 위한 개량, 전략적 목표 없이 추구되는 개량, 변혁적 전략과 합치되지 않는 개량은 배격해야 할 대상이다.

2) 정책참가는 생활옹호 투쟁의 일환이다.

임금, 노동조건, 고용 등에 걸친 노조의 기본적 제요구는 노동자의 노동 생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이다. 이런 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고,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노동 생활조건은 기업의 테두리 안으로 한정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 나아가서는 체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규정된다. 그리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향상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투쟁의 과제와 영역에서 생활옹호 투쟁이 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과제와 영역을 대별하면, ①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개선 투쟁, ② 노동조건 이외의 각종 생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옹호 투쟁, ③ 실업 반대, 고용확보 투쟁, ④ 평화와 민주주의 옹호 투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생활옹호 투쟁의 과제와 대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공격 연금의 확충 등 노동력 판매가 불가능할 때의

생활보장, 주택 학교 보육소 복지시설 교통 시설 등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지역적 조건의 확보, 인플레이정책 반대와 세금삭감 요구 등 임금가치(=화폐구매력)의 하락방지, 공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 생활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생활옹호 투쟁은 대부분 정부 또는 지방자치체를 대상으로 전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또는 집단적인 자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인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런 투쟁은 대체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직접 반영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계층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옹호 투쟁은 제도개선 투쟁을 중심 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제도적 투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옹호 투쟁은 광범위한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옹호 투쟁의 과제를 작업장 내의 과제와 어떻게 결합하고, 또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를 국민 일반의 그것과 어떻게 조정,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1968년 대중적 정치투쟁을 치른 뒤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이 '공장에서 사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한 국민적 생활옹호 투쟁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장 내의 임금 요구에서 분배제도 개선과 세제개혁 요구로, 작업장 내의 노동환경 개선 투쟁에서 의료 개혁 또는 환경오염 저지투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 교통 통근문제 나아가서

는 주택 도시계획 문제의 추구로, 해고방지 투쟁에서 고용보장 투쟁으로, 복지후생 확충 요구에서 사회보장 증진 요구로, 사내 교육훈련 문제에서 교육개혁 문제로, 작업장 민주화 투쟁에서 산업 민주화 또는 정치 민주화 투쟁으로 진전시킨 것이 그런 경험이다.

민주노총이 설정한 '사회개혁 투쟁'은 이런 맥락에서 생활옹호 투쟁의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97년 사회개혁 투쟁 과제인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규제 강화 및 노조의 경영참가,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민주적 관리운영이 그러하다. 또 산별 연맹들의 추진 과제인 의료민주화, 교육개혁, 금융개혁, 불공정 거래 개선, 교통문제 해결, 언론 민주화, 건설 부조리 척결, 환경개선, 세계개혁 등과 지역 조직이 추진할 지역 주민 공동 생활상의 요구 등이 그러하다. 이런 요구와 과제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정책적 및 정치적 투쟁과 함께 정책참가를 통한 제도 정책 개선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래서 정책참가는 생활옹호 투쟁의 주요한 통로인 것이다.

3) 정책참가는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은 현대 노동조합운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본 과제이다. 노동운동이 경제위기와 국민생활 파탄의 근원인 현대 자본주의의 지배에 대응해 노동자계급과 국민 일반

의 생활옹호를 추구하고면서, 독점자본의 경제적 지배와 축적운동을 민주적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경제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촉진할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민주주의의 기본 성격은 무엇인가.

경제민주주의는 현대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순의 전개에 따른 노동자와 근로 대중의 절실한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날 독점자본의 축적된 사회적 힘은 갈수록 거대화되면서 국가기구나 밀접히 결합함으로써 그 지배와 수탈은 더욱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반사회적 행동을 민주적으로 규제하고 경제를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와 투쟁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주의는 독점자본 중심의 국가정책과 독점적 대기업의 무제한적인 축적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반독점 민주주의적 성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요구와 투쟁은 그 긴급성과 필연성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규제가 중요시 되나, 다른 한편으로 정치의 혁신과 국가의 민주적 개혁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적 규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반독점 민주주의라는 기본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의 철저한 실현과 함께 추구되는 경제민주주의는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민주주

의는 반핵, 평화, 군축과 아울러 호혜평등의 신국체경제질서 확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근로 대중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활옹호를 목표로 광범한 동맹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주축으로 한 밑으로부터의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위로부터의 개혁



노조의 정책참가는 기본적으로 사회개혁을 지향해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참가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는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된다.

정책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조합의 정책참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참가가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나 제도 결정 기구에 노조 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국가와

자본의 이해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의 정책참가는 목표와 원칙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목표와 원칙의 올바른 설정

노조 정책참가는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또한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옹호와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양보를 통한 개량적 성격을 지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개혁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사회의 상황과 구조에 비추어 개량의 한계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개량의 성격이라는 것도

독점자본의 축적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의 정책참가는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의 실현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조 정책참가에서 강조되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겠다.

첫째, 정부의 정책과 정부 자본 및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들의 주장이 갖는 오류와 모순을 폭로해

내고,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와 주장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와 자본쪽의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

둘째, 정책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데는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참가는 기본적으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투쟁과 결합하고 민주세력의 통일행동이 크게 진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째, 노조는 정책 결정 심의 기구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경우, 관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골라 그 활동을 뒷받침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표로 참가하는 사람은 연구와 조사를

계을리하지 않으면서, 정부쪽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구 참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자료를 대중선전과 대중투쟁의 조직에 중요한 무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째, 정책참가는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정부 투쟁에서는 노동자의 통일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독점자본의 정책을 폭로하는 교육과 선전활동을 조직해야만 한다. 또 제도적 요구와 기업내 투쟁의 내용을 명확

히 하고, 제도적 요구와 결합된 산업별 통일투쟁과 지역에서의 통일 행동을 전개할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지방자치체 또는 지역 차원의 정책참가를 통해 실현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세금 감면과 공공요금 인상 반대, 주택문제 해결,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개선, 공해방지, 복지 문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한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그리고 경총회장.

화 시설 확충, 교육제도 개선, 지방자치의 확립과 주민의 민주적 권리 보장 등이 그것이다. 이런 지역 차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조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민주단체와 주민 조직들과 함께 통일행동을 조직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정책참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 기구 운영의 민주화와 다양한 참가 방식의 활용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들은 그 성격

에 따라 구성과 운영 방식이 각기 다르다. 노동위원회와 같이 노조대표와 사용자단체 대표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경제대책협의회처럼 각계를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기구도 있다.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같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직업훈련심의위원회처럼 직업훈련 정책에 관한 자문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기구 운영이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어 버리거나 편파적으로 운영될 경우 노조의 정책참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기구 운영의 민주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런 권한과 임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과 활동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건의나 의견 제시로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여기에 기구 참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구 운영의 민주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참가의 또 다른 성과가 될 수 있다.

노조의 정책참가는 특정한 정책 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회 안에 설치된 전문가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국회 청원 활동, 대정부 대정부 건의 활동과 로비 활동, 여론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캠페인 전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책 제도 개선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고

이런 활동이 정책 결정 참가를 촉진할 수 있다.

3) 조직과 투쟁의 병행 추진

노조 정책참가는 조직과 투쟁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 오히려 정책 결정에서 '포로'의 처지를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 내부의 비판과 분열을 불러 일으킬 소지마저 지닌다.

정책참가에서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은 전국중앙조직의 역할인데, 전국중앙조직은 산하 조직의 통일적 역량을 결집하고 총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을 추진함과 아울러 민중세력이나 민주세력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책 제도 개선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형태의 산업별 체제로의 전환과 지역조직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노조 정책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의 정책참가 효과를 높이기 될 것이고 단체협약상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이 노동법상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추진력이 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정책의 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 투쟁이 노동법 개정을 이끌어 낸 직접적인 동력이 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투쟁력이야말로 정책참가가 개량

주의에 머물지 않고 개량을 통한 적극적 의미의 개혁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요건인 것이다.

4) 정책 역량의 향상

정책참가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힘은 조직과 투쟁 역량이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데는 노조의 주체적인 정책 역량의 향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먼저 정책 제도 요구의 내용, 목표와 방침,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요구의 근거와 명확성, 요구 실현을 위한 정세와 전술 등을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정책 역량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위한 과학성과 전문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정책에 대응해 노동자계급의 정책 제도 요구를 제시하여 투쟁력을 결집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정책 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책 연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중앙집중화와 함께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문기구의 설치도 요구되고, 이와 아울러 국내외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5) '정치 세력화' 추진

노동조합 정책참가는 정책 제도 개선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문

제와 관련된다. 정책참가는 주로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면서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한 방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 정책참가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게 되고, 노동자의 정치역량 강화가 정책참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노동운동 발전의 당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 구성에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의 정책 제도 개선 역량의 향상을 비롯하여 선거투쟁을 포함한 정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다른 민중운동 역량과의 정치적 동맹 구축 등을 함축한다. 그런 가운데 노동자계급을 핵심으로, 민중세력을 주축으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개혁을 목표로 세워 대중투쟁과 병행하여 정당 구성을 추진하는 일이 정치세력화의 중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즉,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노동자의 정치적 자각과 노동조합의 정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부들의 이론과 사상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일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투쟁 영역을 개발하고 투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정책참가 목표의 실현은 이런 정치역량 강화와 정치세력화의 추진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